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외식업계, 줄줄이 가격 인상

2017년 8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등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12월 26일 발표했다.

TF는 최종보고서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앞두고 2017년 말부터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12월 말 업계에 따르면 놀부부대찌개는 대표 메뉴인 놀부부대찌개 가격을 7천500원에서 7천9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전체 찌개류 가격을 평균 5.3% 올렸다. 2010년 6월 이후 7년 5개월 만의 가격 인상이다. 신선설농탕도 12월 4일부터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설렁탕은 7천원에서 8천원으로 14% 올랐다. 앞서 롯데리아도 11월 말부터 불고기버거(2.9%), 새우버거(5.9%)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

이들 업체가 2018년부터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가격을 미리 올렸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 가격을 올리는 업체가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월 외식물가 상승 폭은 2.7%로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0월 19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공사 중단 기간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에 방수포가 덮여 있다.

지화하겠다는 정책은 원자력 업계와 건설지역 내 일부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는 공론조사는 공약을 강행하기도 폐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정부가 찾은 묘안이었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정보를 충분히 접한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공의 의견을 확인하는 기법을 말한다.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보니 우려가 적지 않았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결정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손에 맡기느냐 ▲국민 의견 수렴에 3개월은 너무 짧다 ▲결론을 내놓고 끼워 맞추기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등 각종 우려가 쏟아졌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외신기자클럽이 12월 6일 개최한 ‘2017 SFCC 송년의 밤’ 행사에서 언론상 수상소감을 통해 “위원회가 탄생부터 축복받지 못한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두렵고, 긴장되고, 앓음한 심정이었다.”고 회고했다.

■ 공론화위·시민참여단, 찬반 팽팽한 가운데 ‘공론화’ 성공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무거운 책임을 안고 7월 24일 출범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제한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위원을 2명씩 선정했다.

공론화 과정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국무조정실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에너지 분야 관련 이해관계자를 제외하자 전문가를 배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안건으로 상정한 이사회가 노동조합의 반발로 무산되자 7월 14일 장소를 옮겨 기습적으로 의결했다. 한수원 노조와 원자력 학계는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공론화위원

시민이 결정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 ‘건설 중’ 원전 첫 일시중단…‘시민’에 공 넘김 정부

정부는 2017년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건설 재개 여부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와 전문가들이 좌우하던 국가 에너지 정책 선택권을 국민에게 맡긴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해 온 환경단체 등이 조속한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천억원에 달하고 30% 가까이 진행된 공사를 백

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기권이 논란에 개입하면서 공론화는 진보 대 보수 대결 양상을 띠게 됐고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차분한 논의는 더 어려워졌다.

신고리 5·6호기 계속 건설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등은 '전력 대란', '전기료 폭탄', '국가적 자해행위'라는 강한 어조로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건설 중단을 주장한 환경단체는 영화 '판도라'의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원전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탈원전 정책 홍보를 본격화했다.

찬반 양측 모두 다양한 논리를 내세웠다. 신고리 건설 찬성 측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당장은 원전보다 비싸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날씨의 영향을 받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늘면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 건설 중단이 국내 원자력 업계 쇠퇴로 이어져 원전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 반대 측은 대규모 지진이 한반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경주 지진으로 입증된 상황에서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영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와 핵폐기물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는 사회적 비용과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원전보다 저렴하며, 원전 감축을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반 시민들은 양측 주장을 경청하고 질문하며 숙고했다. 전화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500명의 시민참여단 중 471명이 오리엔테이션과 2박3일 종합토론회를 포함한 33일간의 숙의 과정에 끝까지 참여했다.

시민참여단 1조 서은경 씨는 공론화위원회가 활동 종료 후 발간한 백서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된 강연과 토의라는 뻑뻑한 일정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두 (신고리 문제에) 집중을 했다는 점"이라고 기록했다.

■ 건설 재개 확정...후속조치 신속 추진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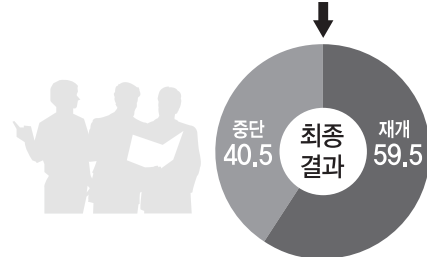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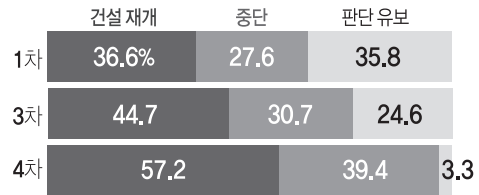
2017년 10월 20일 471명의 '작은 대한민국'이 내린 결론은 '건설 재개'였다. 재개(59.5%)하라는 의견이 중단(40.5%)보다 19%포인트 많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연령대에서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하며 보완조치로 ▲원자력 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한 마련 등을 권고했다. 짓고 있던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마치고 안전 등의 문제가 제기된 원전의 점진적 축소 정책을 계속 추진하라는 권고안은 탈원전 찬반 진영 모두에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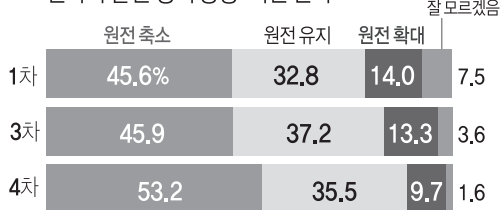
무엇보다 공론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대화로 풀어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김 위원장은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현자(賢者)라고 불리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단 3조의 왕수빈씨는 "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점을 두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해 본 2박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의견 추이

- 2차 조사는 관련 문항 없어 제외
- 최종은 4차 조사에서 판단 유보를 제외한 재개·중단 양자택일 결과



'원자력 발전 정책 방향' 의견 변화



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일 동안 우리는 충분히 다른 의견을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백서에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고, 공사는 10월 25일 0시부터 다시 시작했다.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등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년 만에 육지로 올라온 세월호

■ 7개월간 선체 수색...4명 유해 찾아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침몰 해역에서 인양돼 2017년 4월 11일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세월호 참사일로부터 1천91일 만이자 2015년 8월 7일 인양작업에 착수한 지 613일 만이었다.

세월호는 길이 145m, 폭 22m, 6천825급으로 국내에 운항하는 여객선 중 최대 규모였다. 사고 당시 승객 총 476명 중에서 172명이 구조됐고 299명이 사망했다. 5명은 미수습자로 남아 있다.